

#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30
----------	-----

발의년월일 : 2007년 9월 18일

발 의 자 : 권형례의원 외 12인

## 1. 主 文

- 중앙정부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문제의 심각성 인식에 상응하는 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때,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심각한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떠맡길 수는 없으므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 2. 提案理由

- 가.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생산력과 시장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음.
- 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애타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이 열악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시책의 집행이 어려운 현실임.
- 다. 중앙정부는 실질적인 해결정책과 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재정마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 등에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전달하고자 함.

##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촉구 건의안

1970년대부터 출산력이 급격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1996년까지 산아제한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성장기반은 약화될 것이고 시장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은 크나 큰 짐을 떠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한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인구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히 그 대책을 마련 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이고,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음은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우리의 미래에 미칠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현상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큰 책임을 통감하여 하루속히 그 획기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중앙정부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현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물론, 자녀 양육비 지원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출산장려금 및 자녀 양육비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지원하기를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정책과 그 정책의 실효성에 걸맞는 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후손들이 보다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찬성의원서명

[illegible]

#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국무조정실장
4. 기획예산처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여성가족부장관
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8. 국회의장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11.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12. 한나라당 대표
13. 민주노동당 대표
14. 민주당 대표
15. 국민중심당 대표